

● 교육부, 과외비율-진학률 상관관계 분석

교육부의 '99년도 교육통계연보와 지난해 12월 '사교육비 실태 조사' 결과를 종합 분석한 결과 인문계 고교 졸업생의 4년제 일반대학 진학률은 광주가 85.1%로 가장 높았으나 이 지역 학생의 '입시 및 보습학원 과외'와 '개인 및 그룹과외' 비율은 각각 28.5%, 12.4%로 전국 13개 지역에서 6위에 그쳤다. 반면 '입시 및 보습학원 과외'와 '개인 및 그룹과외' 비율이 전국에서 압도적으로 높은 서울 지역의 진학률이 56.7%로 꼴찌였다.

서울보다 과외 비율이 낮은 다른 지역의 진학률은 62.5~85.1%로 서울보다 최소 5.8%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서울의 진학률은 전체 진학률 66.3%에 비해 10.4%나 낮다. 서울에는 중상위권 이상의 대학들이 많아 서울 고교생의 진학률이 낮은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지만 서울 지역 대학 입학생 가운데 절반 가량이 48.8%가 지방 출신이다. 과외의 효과에 대한 일선 교사들의 견해는 엇갈리고 있다.

교사들의 49.5%는 학습 태도 불성실 등을 이유로 과외가 학교 교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지만 부족한 학교 교육 보충으로 자신감 회복 등을 이유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교사들도 37.5%나 됐다. 정규 교과목의 과외에 대해서도 교사들은 '필요하다'는 32.9%, '불필요하다'는 45.5%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진학률만으로 과외의 효과를 단정하기는 무리라고 말한다.

과외의 효과를 측정하려면 비슷한 학력을 지니고 있으면서 과외를 받는 학생과 과외를 받지 않는 학생이 같은 시간을 공부한 뒤 학력 차이를 비교해야 한다. 안타깝게도 이같은 연구가 없어 과외 효과에 대한 감성적 논란만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2002학년도

에 새로운 대학 입시제도가 정착되고 대학수학능력시험이 계속 쉽게 출제되면 과외의 효과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도 크게 바뀔 것으로 보인다.

학부모와 교사들은 쉬운 대학수학능력시험이 과외에 대한 수요를 줄일 것으로 보고 있으며 벌써부터 교과서 시장은 크게 위축되고 있다.

대학 진학률과 과외 비율 및 시간 비교표

항목 지역	진학률 (%)	입시 및 보습학원		개인 및 그룹과외	
		비율	시간	비율	시간
서울	56.7	40.7	8.4	22.2	4.4
부산	74.0	29.3	9.6	12.2	4.7
대구	76.5	31.7	7.9	14.4	4.1
인천	63.2	24.9	8.4	11.6	4.3
광주	85.1	28.5	8.3	12.4	4.3
대전	78.0	23.9	8.7	14.8	3.9
울산	75.7	30.2	10.9	8.5	4.8
경기	66.0	32.8	8.6	15.3	3.9
강원	68.8	23.9	8.5	9.3	4.8
충청	67.3	22.3	8.8	11.6	4.5
전라	70.0	20.1	6.7	15.3	4.2
경상	65.1	22.1	9.3	14.1	4.3
제주	62.5	22.7	7.7	8.4	4.6

※ 진학률은 인문계 고교 졸업생의 4년제 일반대학 진학률(교육통계연보), 비율은 전체 학생 가운데 과외를 받는 비율, 시간은 과외를 받는 학생의 주당 과외 시간('99년12월 교육부 조사)

● 김대통령, 대학교육은 대학에 일임 지시

김대중 대통령은 5월 9일 정부조직개편과 관련, 초·중등학교 교육행정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고 대학교육은 대학 자율에 맡기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과거처럼 교육부가 초·중등학교, 대학교육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김 대통령은 "교육부는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 적응할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주임무"라며 "인력 배양에 혁명적인 변화가 오고 있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 총리 신설과 함께 학교행정의 관할권이 현재 교육부에서 지방자치단체와 대학으로 옮겨

질 것이 확실시 된다.

**정부조직개편 김대통령 지시사항**

- 초·중등 교육행정 지자체 이관
- 대학교육 자율화 교육부 관할권 이관
- 청소년 분야 여성부 관할 여부 논의 계속
- 중앙 지방정부간 효율적 권한 배분

**☉ 국무총리, 대학교육 지방이전 검토 지시**

박태준 국무총리는 5월 8일 총리실 간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수도권 과밀 해소를 위해 30대 기업 본사와 종합대학 본교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지방 이전을 추진하는 기업 및 대학에 대해 세제 감면 등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는 한편 정부투자기관과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의 수도권 입지 규제를 강화하고 시범적으로 일부 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 교육부, 'BK21' 부진한 사업단에 지원액 30%삭감**

교육부는 5월 9일 고급인력 양성을 목표로 추진중인 '두뇌한국(BK) 21' 사업과 관련, 올해부터 매년 평가를 통해 추진실적이 미흡한 사업단에 대해서는 국고지원액을 최고 30%까지 삭감기로 했다.

특히 오는 2002년과 2004년 2차례 중간평가를 실시, 목표에 미치지 못하는 부진한 사업단은 탈락시킨 뒤 새로운 사업단을 선정, 지원키로 했다.

교육부는 이날 문용린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염곡동 한국학술진흥재단에서 사업단장회의를 열어 이같은 방침과 함께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각 사업단이 제출한 연차보고서를 토대로

오는 7월께 입학제도 개선, 학부정원 감축 및 모집단위 광역화, 대학원 문호개방, 연구비 중앙관리제 등 제도개혁과 교수논문 발표, 대용자금 확보 등 사업목표 달성실적 등을 평가, 국고지원액을 대폭 차등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 김화진 대학원 지원 과장은 "전문대학원을 지원하는 특화사업의 경우 100%를 확보토록 돼 있는 대용자금을 실제 거둬들인 액수만큼 국고 지원하고 과학, 기술, 인문·사회부문에서도 평가결과에 따라 최고 20~30%를 삭감하거나 증액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현재 박사후 과정생(Post-Doc)이 병역특례자로 지정될 경우 지정 연구소에서만 근무토록 돼 있는 현행법을 개정, 'BK21' 사업단 등 대학원에서도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BK21' 사업으로 434개 사업단을 선정, 2천 495억 원을 지원했으며 각 대학은 학부생 6,595명과 대학원생 9,275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다.

**☉ 인적자원개발 종합계획 수립 작업단 발족**

교육·문화·과학기술 등 인적자원 관련 정책을 심의 조정하는 인적자원개발회의(의장 문용린 교육부 장관) 3차 회의가 5월 15일 오후 정부중앙청사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교육부가 추진중인 국가 인적자원개발의 비전과 추진전략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등이 추진하고 있는 e-비즈니스 및 IT(정보통신)분야 전문인력 양성과 유치대책 등이 논의됐다.

교육부는 국가 인적자원개발 비전과 추진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민간과 연구소, 정부부처 관계관이 참여한 '작업단' 구성을 완료, 여론수렴작업과 공청회를 거쳐 오는 10월 말까지 국가 인적자원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을 확

정기로 했다고 밝혔다.

작업단은 민간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된 '연구팀(팀장 김태기 단국대 교수) 과 출연 연구기관 연구원으로 구성된 '연구자문팀', 연구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경제부 등 12개 부처 실무과장이 참여한 '연구협력팀'으로 구성됐다. 작업단장은 연구팀장 김태기 교수와 교육부 기획관리실장이 공동으로 맡았다.

이밖에 e-비즈니스 및 IT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유치를 위해서는 수요자 지향적인 인력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대학 등 교육기관의 프로그램을 확충하는 등 인력 공급 인프라 확충에 대한 장단기 대책도 제시됐다. 이날 회의에는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기획예산처 장관을 비롯한 12개 부처 장·차관들이 참석했다.

### ☪ 교육부, 2000학년도 1학기 대학 편입학 현황 발표

교육부는 기존의 대학 편입학 제도가 지방대학 재학생의 수도권 대학으로의 대거 이동으로 지방대 교육공동화 현상을 초래하고 수도권 소재 대학 신입생조차 편입 준비에 몰두하는 등 대학 1~2학년 교육이 파행으로 접철되자 '99년 2학기부터 2학년 편입학을 금지하고 3학년에 한하여 편입학을 허용함과 동시에 편입학 여석 산출 기준에서 휴학생을 제외토록 하는 편입생 선발제도를 시행한 바 있다.

위와 같이 개선된 편입학 제도에 따라 시행한 전국 4년제 대학의 2000학년도 전기 편입학 선발현황에 대하여 최근 교육부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대학 편입학 모집인원은 전년도에 비하여 대폭 감소하였고 지방대학에서 수도권 대학으로의 이동현상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총 20,775명을 선발한 2000학년도 1학기 편입학 인원은 '99년 1학기 총모집인원 40,264명에 비해 일반편입은 19,708명이 감소한 15,701명, 학사편입은 32명이

증가한 3,487명, 군위탁생, 재외국민과 외국인 편입 등으로 1,587명을 선발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수도권 대학의 선발 현황에서 일반대학 출신자가 2,132명(34.6%)으로 '99년 1학기 8,741명(55.7%)에 비하여 대폭 감소되었으나, 지방대학의 선발 현황은 총선발인원 9,535명 중 재학생의 수도권 이동 편입인원은 1,306명(13.7%)이고, 순수 충원은 8,229명(86.3%)으로 나타나 작년 순수 충원율(72.3%)에 비하여 크게 증가한 것은 지방대 재학생의 수도권 대학으로의 편입이 감소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 ☪ 고교장 추천 학교운영위가 심의

교육부는 지난달 28일 "학운위가 고교장 추천에 관한 모든 사항을 심의 자문 하도록 일선 고교에 지침을 시달렸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 지침에서 "각 학교는 대학이 추천자 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 학운위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추천자 선정 기준과 절차를 정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교육부는 '3학년 담임회의에서 추천기준 마련→교무회의 심의→학운위의 심의 또는 자문→학교장 결정' 등의 절차를 거쳐 추천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또 추천 대상자의 선정과 관련해 '대학의 기준에 따른 희망자 접수→학급담임 또는 별도 추천위원회의 대상자 추천→교무회의 심의→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학교장 추천' 등의 절차를 거치거나 3학년 담임교사나 전 교직원 추천 인원의 3배수를 추천한 뒤 추천위원회가 2배수를 선정하고 학운위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학교장이 최종 선정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교육부는 고교장의 독단이나 일부 학부모의 '치맛바람' 등에 따른 논란을 예방하기 위해 이 같은 지침을 마련

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지난해 8월 초·중·고교교육법을 개정하면서 학운위가 고교장 추천제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했다.

학운위는 학부모 교사 지역인사 등이 학교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공립학교의 경우 심의, 사립학교의 경우 자문하는 기구다.

학운위는 모든 초·중·고교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약 70%에 달하는 사립학교가 설치를 거부하고 있어 학운위를 설치하지 않은 사립고교가 어떤 방식으로 고교장 추천자를 선정할지 관심거리다.

### ☞ 교육부, 'BK21'에 열외된 지방대도 지원

교육부가 두뇌한국(BK)21 사업을 시행하면서 일부 대에만 집중적으로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자 이 사업에서 소외된 지방대 기초과학분야 육성에 나섰다.

교육부는 6월 4일 기초과학 연구 기피로 우수 인력 확보와 과학기술 인력 양성이 어려운 지방대를 육성하기 위해 기초과학 전공 우수 대학원생 100명을 과학기술장학생으로 선발, 올해 30억 원을 지원하는 기초과학 핵심요원 지원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방대 기초과학분야 박사과정 대학원생으로 각 대학의 추천을 받아 연구과제를 제출하면 교육부는 심사를 거쳐 100명을 선발해 대상과제 연구비와 해당 대학원생의 생활비 등 1년 동안 1인당 3000만 원씩을 지원하게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공개입찰 경쟁으로 선정된 BK21 사업은 지방대의 경우 우수한 인력임에도 상대적으로 낙후한 시설 등으로 인해 탈락한 일이 많았다"면서 "장기적으로 과학인력의 지방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이들

지방대에 대한 추가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물리, 화학, 생물 등 자연과학 대학원이 설치된 부산·대구·광주 등의 지방 국립대를 중심으로 각 대학간의 기초과학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추가 예산지원도 적극 검토중이다

### ☞ 교육대학 편입학 정원 20%까지 증원

교육부는 6월 4일 현재 정원의 5%로 제한하고 있는 교육대학 학사편입학 규모를 내년부터 정원의 20%까지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년단축과 명예퇴직 등으로 많은 교원이 교단을 떠나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초등교원을 단기간에 양성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교육기간이 2년밖에 되지 않아 자칫 초등교육의 질 저하를 가져올지 모른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편입학 자격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일반대학 사범대를 졸업하거나 교직과정을 이수한 사람 등으로 한정된다.

한편 교육부는 6월 17일 마감된 2001학년도 전국 교대, 사범대 정원신청에 앞서 사범대는 증원을 억제하고 교대는 일부 탄력운용을 골자로 하는 정원조정 지침을 전국 교대와 각 대학에 시달렸다.

### ☞ 새교위, 의학·법학 전문대학원 도입안 마련

그 동안 논란을 거듭해 온 법학(3년) 및 의학(4년) 전문 대학원 도입안이 대통령직속 자문기구인 새교육공동체위원회(위원장 이돈희)에 의해 최종 마련돼 7월 초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고된다.

새교위는 6월 9일 4년제의 법대 학부를 그대로 존속시키고 법학부 졸업자에 한해 3년 과정의 법대대학원 입학자격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안을 확정했다. 또 자연계와 인문계 구별없이 모든

대졸자에게 4년제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자격을 주는 이른바 4+4체제의 의학전문대학원 제도도 마련했다.

이번 최종안은 지난해 9월 새교위가 발표한 개혁방안이 법조계, 의료계 및 대학들의 거센 반발에 따라 유보된 이후 의사와 변호사 수요 증가라는 국민적 요구와 각계의 현실을 충분히 고려해 만든 것이다.

최종안에 따르면 법학대학원을 마친 사람은 1차 사법시험 통과 자격이 주어진다. 또 의학대학원 4년 과정 동안 의학교육뿐 아니라 인턴 및 레지던트 임상실습교육도 병행, 졸업 후 다단계 시험을 통과하면 의무박사 학위를 받게 된다.

새교위 관계자는 "법학대학원은 오는 2002년부터, 의학대학원은 2004년부터 실시하도록 관련부처와 상의, 제도를 정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대 학부를 없앤 채 모든 대졸자에게 법학전문대학원 문호를 개방하고, 자연계 순수과학과정을 마친 전공자에 한해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자격을 주기로 한 지난번 1차 개혁안은 법학교육의 부실, 2년 과정의 이학교육과정 신설 난망 등을 이유로 대학들과 각계가 크게 반발하자 백지화된 바 있다.

### ☪ 교육부, 국립대학 구조조정 재개

교육부가 최근 전국 국립대학을 대상으로 '국립대학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수렴에 나서자 지난해 말 중단됐던 국립대학 구조조정 재개의 신호탄으로 일부 국립대들은 받아들이고 있다.

6월 20일 교육부와 경남지역 국립대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역거점대학 육성과 대학과 학과간 통·폐합을 포함한 21세기 국립대학의 새로운 역할과 기능 정립에 나서기로 하고 지난 15일까지 전국 51개(교육대 포함) 국립대학으로부터 의견서를 받았다.

교육부는 이번 의견수렴을 통해 ▲설치목적 재검토를 바탕으로 한 국립대의 민영화 ▲외부위탁, 폐지 및 통·폐합 ▲권역별 특성화 및 소규모 대학의 권역별 대규모 대학과의 통·폐합 ▲대학간 비교우위에 있는 학과(부) 상호교환에 따른 유사중복학과(부)의 통·폐합 ▲내부 운영시스템 개선 방안 등을 논의대상으로 설정했다.

교육부는 국립대 발전계획 수립추진반을 종합추진위와 실무추진반으로 나눠 운영하며 지역협의회, 공청회 및 설명회를 거쳐 내달 말까지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전국 국립대 가운데 후발 7개 대학은 선발 대학에 비해 통·폐합에 따른 위기감이 상대적으로 높게 조성되면서 교육부에 공동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공동대응에 나서고 있다. 특히 지리적으로 오지에 위치했거나 학생수가 정원에 비해 크게 적은 대학들은 거점 대학으로의 통합을 우려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것은 없으며 국립대의 특성을 감안한 장기적이고 자생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해 보기 위한 것"이라며 "각 대학들이 나름대로 자생을 전제로 한 발전방안을 제출해 검토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 ☪ 교육부, 교육세율 인상 추진

정부와 여당이 담배소비세·교통세·등유특소세 등에 붙는 교육세를 영구세(당초 올해 말 폐지)로 전환카로 한 데 이어 교육부는 한발 더 나아가 교육세의 세율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는 학교 붕괴 현상과 과외 해금에 따른 공교육 경쟁력 저하 등의 문제가 제기되자 학교 신설(11조 원)·교사 확보 및 처우 개선(4조 5천억 원)등 공교육 내

실화를 위해 2004년까지 34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재원은 이미 확보된 27조 9천억 원과 교육세 증세를 통한 6조 4천억 원(매년 1조 6천억 원)이다.

교육부는 교육세 증세 방안으로 국세·지방세에 붙는 교육세의 세율 조정을 들고 나왔다. 국세의 경우 ▶금융·보험업자 수익금액의 0.5%→1% ▶주세의 10~30%→40% ▶교통세의 15%→20%이며, 지방세는 ▶경주마권세의 50%→80% ▶재산세의 20%→

40% ▶종합토지세의 20%→40% ▶담배소비세의 40%→60%를 제시하고 있다. 교육부의 요구대로 교육세 증세가 이뤄지면 해마다 1조 6천억 원의 국민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그러나 교육세 증세에 대해 재정경제부 등 경제부처의 반대가 만만찮다. 특히 내국세의 11.8%를 배정해 왔던 교육재정 교부금이 내년부터 13%로 늘어나는데 교육세까지 증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